한국, 탄소세 부과하면 “일거양득”

OECD, 화석연료 줄이고 세수도 확보 ... 부동산 관련세금도 높여야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6월20일 한국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세하고 소비세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와 OECD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동개최한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 참석차 방한한 구리아 총장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OECD의 한국 정부에 대한 정책 권고를 재확인했다.

구리아 총장은 “근로에 대한 세금을 낮추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투자역량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낮추고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로 인한 부족분은 소비에 대한 세금을 늘려 확충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부가가치세율이 OECD 평균인 18%에 비해 많이 낮은 10% 수준”이라며 “이 방법을 택하면 한국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OECD의 다른 회원국들보다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국이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더 늘리는 한편, 탄소배출량에 대해 녹색세금(Green Tax)을 부과해야 한다”며 “화석연료의 사용량도 줄이고 세수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녹색성장>론에 대해서는 “녹색보다는 성장에 더 역점을 둔 어젠다로, 개발의 단계와 무관하게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자연과 천연자원을 보존하면서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자는 것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6/21>